
1차 평등정책 콜로키움 & 1차 다문화사회 정책 포럼

1차 평등정책 콜로키움 & 제1차 다문화사회 정책 포럼 - 한국 이민담론의 분절성과 그 이데올로기적 배경 -

- 일시: 2008. 4. 18(금) 15:00
- 장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본관 3층 회의실
- 발표자: 임한진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토론자: 홍기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팀장)
정일선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개발실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한국 이민담론의 분절성과 이데올로기적 배경

엄 한 진(한림대, 사회학)

1. 한국 이민논의의 현단계

최근 한국 이민논의의 특징 중 하나는 2000년대 초반 이래 이루어진 다문화논의 및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이다. 이민 문제에 대한 논의와 정책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만큼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고 다문화 열풍이 조금 진정되자 이 한계에 대한 지적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비판의 내용은 이민정책 및 이민논의의 전반적인 저발전상태에 대한 지적, 다문화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및 한국전통문화에 치중한 지원 등 사실상 한국사회 중심적인 동화주의적 요소가 강하다는 지적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오경석(2007)과 이선옥(2007)은 최근 국가가 추진해 온 일련의 정책 및 프로그램을 ‘관주도형 다문화주의’(state-sponsored multiculturalism)로 명명하고 이런 방식의 다문화주의는 과거에 비해 조금 세련된 ‘외국인 관리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심보선(2007)도 한국의 다문화 정책이 관용의 차원에 머물고 있어 아직은 진정한 ‘인정의 정치’가 형성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논지는 다르지만 윤인진(2007) 역시 최근 한국의 다문화 논의 및 정책의 조급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이주민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사업장 이전의 자유박탈, 단기 3년간의 순환정책, 방문취업제의 차별성 등 현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이주노동자인권연대, 2006)

주로 학계나 시민단체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이러한 흐름과 달리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특히 이주민들과의 접촉빈도가 높은 집단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존재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에 대한 특혜적 성격의 제도들이 한국인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과의 형평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불만이 나타나고 있다. (김이선·황정미·이진영, 2007) 그간 한국사회, 특히 국가와 언론이 보여준 이주민들에 대한 관용적 태도를 비판하는 반동적 흐름, 즉 일종의 ‘테르미도르’가 동화주의, 온정주의를 비판하고 보편적인 노동권, 진정한 관용을 촉구하는 급진주의와 동시에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IMF 이후 극도로 경쟁적인 일상과 불안정한 고용상황을 겪고 있는 한국사회가 외국인들에게 보여주는 관용은 불안정하고 구조적 한계를 지닌 것일 수밖에 없다. 현 이민정책에 대한 좌·우에서의 비판은 이러한 객관적 현실의 반영이다.

일정정도 진보한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이동의 자유를 막고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고용허가제, 특히 2007년 여수화재 참사 직후에 행해진 출입국관리법 개악시도(최상철, 2008: 51-52),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살인적인 인간사냥은 2000년대 초반 이래 한국사회를 달구었던 열광의 국면에서 이제 보다 정상적인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들이다. 보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와 달리 이주노동자들은 다문화 신드롬이 나타나기 직전인 2003년경부터 전례없는 단속과 추방을 경험하기 시작했으므로 다문화 열풍에서 빗겨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출국조치된 외국인의 수는 이러한 억압적 상황을 잘 말해준다. 2003년 말부터 전개된 본격적인 단속정책의 결과 2004년 22,826명이 단속으로 추방되었고 27,616명이 자진출국하였다. 단속에 이은 출국조치를 당한 외국인의 수는 2005년 45,052명에 이르렀고 2006년에는 23,771명이었다.(이정원, 2007: 24) 이는 불법체류자를 체포해도 그 중 강제추방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은 외국과 비교해볼 때 매우 높은 수치이다.

물론 언론이나 정부, 그리고 일반 국민에게서 반동의 양상이 뚜렷한 것은 아니다. 다문화논의가 확산된 지난 몇 년간은 산업연수생제도에서 고용허가제로 이어진 제도적 발전이 이루어졌던 시기임을 부정할 수 없고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의 시민사회에 의한 대응이 확대일로에 있다.¹⁾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결혼이주여성과의 장기적인 공존이 보다 확연해지고 그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일상적 차원에서의 갈등이 가시화되고 있다. 즉 일반적인 경우 이민문제의 핵심인 2세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민 2세들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2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징후이다. 스테레오 타입은 사실은 그 안에 서로 차이가 나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어떤 집단을 몇 가지 특징으로 단순화해서 이 집단 전체가 그런 것으로 과도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나찌 독일이 유대인들을 박해할 때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을 만들어 유대인을 열등하고 불순한 존재로 여기게 하여 결과적으로는 이들을 문제가 없는 우리 독일인들로부터 격리시키거나 학살하는 근거로 삼았다(모스, 2004: 95-115) 즉 어떤 집단에 대한 단순화된 규정은 인종주의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단순화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 이미 이들을 접하는 학우나 교사, 이웃사람들은 이들이 언어문제가 있고 그래서 당연히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존재로 여긴다거나 또는 문제아가 될 가능성이 큰 아이, 위험한 아이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김이선·황정미·이진영, op.cit.) 사실은 학생에 따라 성향과 능력이 다르고 한 학생도 분야마다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문

1) 전체적으로 보면,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과 참여기관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그 결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에 다문화가정 대상 프로그램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 조사에 따르면 지자체와 지역시민단체가 운영하는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프로그램은 매년 20%씩 늘고 있다. 그 배경을 보면 초기에는 외국인 여성노동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결혼이주여성 이 늘면서 다문화가정으로 교육 방향을 바꾼 단체가 대부분이다.(동아일보 2008년 1월 9일자)

뚝그려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주민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대응은 이렇게 현실에서 관용과 경계심이²⁾, 담론에서 다원주의와 동화주의가 혼재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진정한 관용이나 냉정한 태도를 요구하는 식의 규범적 논의의 틀에 얽매어 있다. 규범적인 차원의 논의를 넘어서는 방안은 이 복합적 상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근저에 있는 원인의 규명일 것이다. 본 연구는 그 원인 중 하나를 이민담론이 지닌 분절성에서 찾고자 한다. 이주민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미디어에서의 재현방식에 존재하는 분절성을 확인하고 이와 함께 이 분절성의 저변에 깔려있는 논리를 도출하고자 한다.

2. 한국 이민담론의 분절성

이민에 관한 정부, 학계, 언론, 시민사회의 논의는 이중적 의미에서 분절되어(segmented) 있다. 하나는 이민논의 내부에서의 분절이고 다른 하나는 이민논의와 여타 사회논의간의 단절(rupture)이다. 이러한 양상에 대해서는 이미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에 대한 관심의 불균형, 동포와 비동포, 동포세계 내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적 대응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언급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민담론의 분절적 구조와 그 배경을 규명하고자 한다. 분절성에 대한 논의는 이민집단별 개별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연대하는 방안의 모색한다는 실천적 함의를 지닌다.

1) 내적인 분절: 집단에 따라 상이한 이민담론

한국사회의 경우 내적인 분절은 이주민의 유형, 국적 등에 따른 차별적 접근, 유형에 따라 포섭과 배제를 구사하는 차별적 전략, 이민집단들을 분리하고 경쟁시키는 ‘분할통치전략(divide and rule strategy)’으로 나타나고 있다.(엄한진, 2006) ‘이주노동자(가족) 대 결혼이주여성(가족)’, ‘제한 외국인 대 재외 한국인’, ‘재외동포 출신 이주민 대 기타 이주민’의 분리가 현재 언론의 이민보도나 정부 이민정책의 전제가 되고 있다. 이는 분류(classification)와 차등화(differentiation)(Bourdieu, 1970)라는 현대사회에 일반적인 권력의 작동방식의 일환인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의 구분과 차별적 대응은 한국 이민담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문제점이다.

한국의 이민현상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서구사회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유럽, 미국의 경우에는 이민자들이 구 식민지에서 오거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한국인들처럼 역사적, 정치적으로 연관이 깊은 나라로 간다. 그리고 이민의 유형에서는 노동

2) 이민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두려움(fear) 또는 적대감(hostility)의 형태를 띠며 사회의 불안정성의 산물이다. 불안정한(uncertain) 상황에서 사람들은 불안해(unsecure)진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상태는 이민의 위협을 과장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쉽게 된다. 이 상황에서는 전혀 그럴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은 위협으로 인식된다. 위협은 기정사실화되고 단지 이 위협이 어느 정도일까, 점점 커질까라는 식의 질문만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Posen, 1993: 103, Alexseev, 2005, p.39에서 재인용)

이민, 그리고 정치적 박해나 전쟁, 기아 등을 피하기 위해 이주한 정치적, 경제적 난민이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이다. 이와 달리 한국으로 오는 이주민들은 역사적으로 우리와 관계가 거의 없었던 국가들에서 많이 오고 유럽, 미국에 비해 결혼이주 여성의 비중이 크다.³⁾

결혼이민자의 수는 현재 10만 명 정도로 전체 한국거주 외국인의 14% 정도이다. 이 중 여성이 8-9만명 정도이고 남성이 1-2만명 정도이다. 전체 이주민 중 결혼이주 여성의 비중이 큰 것은 농촌총각문제,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농촌문제라는 한국 사회의 조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당연해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수적으로 훨씬 많은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무관심은 설명이 필요하다. 생명을 잉태해주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열렬한 관심의 이면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놀라운 무관심이 있다. 이주노동자의 존재가 드러날 때는 그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다.(최상철, 2008) 작년 2월 여수화재 참사 때가 그렇고, 지난 1월 7일 이천 냉동창고 화재 때도 그러하다. 2006년 4월 3일 미국 미식축구의 영웅 하인즈 워드의 첫 방한 이후 불과 23일 만에, 그리고 그의 두 번째 방한이 있었던 2006년 4월 26일 발표된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기본 방향'은 한국사회에 고유한 압축적인 성장의 일면을 보는 듯 했다. 그런데 아쉬웠던 것은 국내 이주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점이다.

이 대조적인 양상은 무엇보다도 정부나 국민이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존재, 즉 일종의 '철새'(bird of passage)(Piore, 1979)로 여기는 것과 달리 결혼이주여성들은 아이 때문이라도 영구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관심이 큰 이유 중 하나이다.

한국여성과 결혼한 남성 이주자들 역시 국가정책과 사회적 관심에서 배제되어 있다. 여성이주자의 자녀문제만큼이나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양육 및 교육 문제 또한 심각한데도 말이다. 학계에서도 소위 '다문화' 논의가 부상하기 전, 그리고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들에 대한 연구가 이민연구의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유명기, 1995; 함한희, 1995; 오명석, 1997; 김민정, 2002; 조성원, 2004; 윤형숙, 2003) 결혼이주여성이 이민논의를 독점하면서 이들의 존재도 잊혀져갔다.

이렇게 이민논의가 한 집단에 편중되는 과정과 동시에 다문화담론 내부에서도 다문화가족 개념이 협소화되었다. 다문화가족은 처음에는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

3) 이러한 특수성은 보편적 경향의 일부이기도 하다. 1970, 80년대 이후 세계 이민의 특징 중 하나는 그 다원화에 있다. 이 경향은 성, 인종, 계급 세 차원 모두에서 나타났다. 먼저 남성 중심의 이주현상에서 벗어나 여성이주자의 비중이 늘었다. 이것은 대부분 여성이주노동자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점점 늘어가는 청소, 대인서비스 분야의 수요를 여성들이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다. 계획화된 산업화시대의 이민이 몇몇 나라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이제 점점 더 다양한 지역으로부터 이주민이 오고 있다. 계급적인 면에서도 이민집단의 구성이 다원화되고 있다. 최근 이민은 가난하고 농촌출신의 저숙련 노동자들만이 아니다.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 본국에서 숙련노동자 또는 도시 지역에 거주하던 중간계급 출신자들도 늘고 있다.(Rea & Tripiar, 2003)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결혼이주여성도 최근 늘어난 여성 이주의 한 형태이며 우리와 역사적 관계가 약했던 다양한 지역으로부터의 이민 역시 이민현상의 새로운 양상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

다. 외국인과 한국인과의 결혼으로 맺어진 가족, 동일한 국적의 이주민간의 결혼으로 맺어진 가족, 서로 다른 국적의 이주민간 형성된 가족 등 다문화가족의 의미는 폭넓게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2007년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이란 가족,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다문화가족법 제3조 제1항 가, 나)(이해령, 2007)

분절성은 재한외국인 논의 내부에서뿐 아니라 재한외국인 논의와 재외한국인에 대한 논의의 관계에서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 이민논의의 의의 중 하나는 재외동포의 의미를 다시 보는 계기라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언론보도나 정부정책, 심지어 학계의 논의에서도 이 두 현상은 물과 기름처럼 접점을 발견할 수 없다. 윤인진(2004), 김경일 외(2004)와 같은 일부 재외한인의 이주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경우에는 그것이 이민자들의 적응방식의 유형화와 같은 보편적 이민 이론을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재한 외국인에 대한 논의와 접목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보편적인 현상으로서 한인의 이주를 과학적으로 다루기보다는 모국인 한국의 발전을 상정한 당위적인 차원의 논의들이다. 이것은 단지 재한 외국인에 대한 논의와 소통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넘어서 재외동포문제를 한국사회 중심으로 바라봄으로써 다원적 정체성의 인정을 통한 공존의 길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소가 될 수도 있다.

재한외국인과 재외한국인 문제가 연계되어 논의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는 이 두 집단이 모든 이민자들에 공통된 경험을 가진다는 점이다. 지속되는 정당성 결여(illegitimacy), 떠난 곳과 정주한 곳 양자 모두에서의 부재(double absence)가 그것이다. 그리고 기존 규범에의 적응을 거부하는 자, 일시적이고 종속되고 정치적으로 배제된 존재로서의 자신을 거부하는 자는 이단으로 규정되는 것과 같은 공통의 경험(Rea & Tripiet, 2003)에서 출발할 때 분절되지 않은 논의가 가능한 것이다.

2) 외적인 분절: 사회논의 일반과의 단절

이민담론은 또한 기존의 사회논의와 단절된 채 ‘갈라파고스 섬’처럼 존재해왔다. 현재 가장 활발하게 그리고 가장 우호적인 방식으로 전개되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논의 역시 여성 및 가족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와 유리된 채 전개되었다. 그간 여성운동과 여성학 분야에서 산출된 선진적인 논의들이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주제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오래된 문구도 ‘자신의 몸에 대해 결정할 권리’와 같이 이미 대중화된 가치도 ‘가사분담’에 대한 요구도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우리는 다문화가정의 여성이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사실을 매우 당연시한다. 그러나 잠깐 물러나 생각해보면 이러한 우리의 사고는 한국여성들에 대해서는 이제 결혼과 출산이 의무가 아니며 각자의 생각과 상황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관용적인 것과 비교해보면 매우 예외적인 것이다. 설사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결혼을 목적으로 이주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출산여부 또는 적어도 출산의 시기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출산여부나 출산시기를 조절하기 위해 피임을 하는 것도 다른 한국여성과는 마찬가지로 본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취업 문제 역시 한국여성에게는 나가서 돈 버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면서 이들에게는 금기시하는 이중적인 잣대도 버려야 한다. 이혼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들이 당초에 결혼을 목적으로 왔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가정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혼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담론상에서 금기시되는 것과 달리 현실에서는 이혼율의 급증현상을 볼 수 있다. 한국남자와 외국여자간의 이혼이 급증해 2002년 401건에서 2005년 2,444건으로 6배가 늘었고 이는 동 기간 결혼의 증가율(2.7배)보다 높다. (통계청, 2006) 이 중 혼인과정에 있어서 인권유린, 정보 왜곡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베트남 처는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111.1%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한국여성에 대한 논의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논의의 괴리, 그리고 후자에 대한 가부장제적 관점은 몇 년 전 한국인 여성과 동남아 출신 남성의 결합이 한국 가부장제에 대한 반성을 촉발했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조성원, 2004; 윤형숙, 2003; 김민정, 2002) 당시의 논의는 한국의 젠더논의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그나마 주류담론에서 소외되어왔기 때문인지 또는 아직 수적으로 한국인노동자와의 공간적, 직종별 구분이 가시화될 수준에 이르지 않아서인지 이주노동자에 관한 논의는 보편적인 노동문제 및 노동운동과의 연관성을 고려해왔다.⁴⁾ 그러나 전체 이주노동자의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미등록노동자들의 경우를 포함시키면 일반적인 논의와의 괴리가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은 지극히 불합리한 이주노동자정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불법체류자가 된 20만 명 정도의 미등록노동자는 다문화논의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단속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죽음, 또는 범죄라는 극단적인 양상만으로 미디어에서 재현됨으로써 이들은 1980년대 미국 도시 게토지역 주민들을 지칭했던 소위 '위험한 계급(dangerous class)'으로 인식되거나 기껏해야 최소한의 인권을 걱정해줘야 하는 무력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미등록노동자들을 이민논의에서 배제시키고 범죄집단화하는 것은 불법체류자들을 필요로 해 온 현대자본주의 사회의 논리로 설명될 수 있다. 불법체류자 문제는 1970년대 초 공식적으로는 노동이민을 금지하면서도 계절노동자(독일)나 비공식부문의 불법노동자(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형태로 이주노동자를 활용했던 유럽에서

4) 이주노동자의 경우 자본주의 발전과정의 산물로서의 보편적인 차원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일반노동자의 문제와 분리되어 인식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 기반이 존재한다. 캐슬즈와 코작(Castles & Kosack, 1973)은 독일, 프랑스, 영국, 스위스 이민현상 비교연구에서 각국의 이민정책과 이주노동자들이 참여한 사회운동을 분석하였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완전고용은 자본주의에 큰 위협이다. 임금이 상승하고 이윤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찾아낸 해결책 중 하나가 이주노동자들을 도입해 한편으로는 충분한 산업예비군을 확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값싸고 순종적인 노동자들을 고용해 자본의 이윤실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급진적인 노동운동을 저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그 특징이 저숙련 남성 노동자가 단독으로 오고 일시적으로 머무는 이민의 형태가 유럽에 일반화된다. 그는 이렇게 들어온 노동자들을 '손님노동자'(Guestworker)라고 불렀다. 그런데 그에 따르면 이러한 이주노동자가 제조업에서 10-30% 정도에 달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이주노동자는 주변적인 별도의 계급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일원이 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노동계급은 분할을 경험한다. 주거지에서의 게토화와 유사한 현상이 작업장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때 이 두 집단이 구분되는 기준은 숙련의 정도이다. 이주자들은 저숙련 일자리에 집중되고 토박이 노동자들은 이 자리를 떠나는 경향을 보인다.

중요하게 제기되었다. 부탕(Moulier-Boutang, 1998)의 설명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불법체류자에게 체류증이나 노동허가증을 부여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의 이동의 자유를 억압함으로써 과거 노예와 같이 극도로 통제된 피고용자 집단을 창출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이 집단을 고립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연고주의 등으로 부패하게 하고 더 나아가 범죄집단화하게 함으로써 사회운동을 통한 집단적인 저항을 저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 이주노동자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민담론에 보편성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는 것, 이민에 관한 논의와 주류사회의 일반적인 논의가 결합되어야 하는 것은 이민현상이 지닌 보편성 때문이다. 적어도 자본주의의 출현 이후 일국적 사회현상과 국제이주에 따른 현상은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채 존재해 왔다. 자본주의와 이민이 맺어온 고전적인 관계에서 볼 때 국제이주는 국내이주(이농)의 연장이다(Rea & Tripier, 2003: 33) 1990년대부터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들은 1960년대 이후 대도시로 이주한 농촌출신 한국노동자의 후예들이다. 이들이 떠나온 제3세계의 농촌도 자본주의 논리가 적용되기 시작하던 산업화 시대 한국 농촌의 운명을 시차를 두고 겪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현재의 이주노동자운동도 1970년대 지금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경인지역의 여성노동자들이 촉발시킨 한국 노동운동과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사회 노동운동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기도 했다.⁵⁾

물론 이민담론이 보편성을 회복한 이후 논의과정에서는 보다 정교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민자들의 사회구조상에서의 위치에 대해 이들을 노동계급의 일원으로 간주하는 흐름과 노동계급과 구분된 계급으로 간주하는 흐름이 있다. 전자의 시각은 이민의 자본주의적 기능을 강조하는 맑스주의적 연구자들에게서 나타나며 후자는 사회계급에 대한 베버의 설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들은 사회체제(권력, 가치체계)에의 참여에서 정당성 부족을 근거로 노동계급과 구분된 계급으로 간주한다. 이 문제는 노동운동과 이주노동운동의 관계설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3. 이민담론 분절성의 이데올로기적 배경

그렇다면 이민담론이 대상이 되는 이민집단에 따라 또는 다른 사회논의와 분절되어 전개되어 온 데에는 어떤 사회적 요인이 작용하였을까? 근본적으로는 이들을 나누고 배제시키고 자의적이고 우연적인 방식으로 규정하고 재현할 수 있는 것은 앞서 언급한 한국적 특수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한국과 역사적 연관성이 없고 그

5) 김현주(2007)는 이주노동자운동의 역사를 1) 이주노동자 주체의 자생적 투쟁시기(90년대 초-95년), 2) 외노협으로 대표되는 인권운동 시기(1996-2000), 3) (1) 평등노조 이주지부 를 필두로 한 노동권 운동 및 주체적 투쟁시기(2000년 이후)로 나누었다.

래서 우리와 섞여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이들을 우리와 별개의 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집단에 따라 상이한 성격의 담론은 또한 이주민 집단 내부에 존재하는 이주유형별, 출신국가별 계층화라는 객관적 조건과도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민담론의 분절적인 성격이 한국사회 전반의 이데올로기적 구조와 맺는 연관성을 알아본다.

이민담론의 분절성은 현 한국사회의 주류담론을 형성하고 있고 이민 집단에도 적용되고 있는, 더 정확히 말하면 이들에게서 가장 효과적인 토대를 발견한 다양한 이데올로기들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 인구담론, 동아시아담론, 가족주의(familialism), 안전담론(security discourse), 본질주의적 경향의 문화주의(cultural essentialism) 등이 그것이다. 이 이데올로기는 각각의 이민집단에 전략적인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 문제는 개인주의와 성평등주의의 헤게모니가 아직은 유지되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제기되어 왔던 가족주의가 노골적으로 제기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가부장제적인 인식은 낮은 출산율을 근거로 확일적으로 진행되어 온 인구(수) 담론 덕택에 가능한 것이었다.

저출산고령화 담론은 여성결혼이민자, 특히 젊고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베트남여성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관심의 한 배경이다. 물론 이는 한국에 국한된 현상만은 아니다. 최근 일본이 이주민 수용에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저출산고령화때문이며 출산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유럽 역시 마찬가지다. 1970년대 초 노동이민의 금지조치 이후 30년만에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펴게 된 배경에 고령화 현상이 있었다. 이민정책 변화의 계기는 새로운 이민의 유입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고령화로 인해 2050년이면 유럽은 현재의 인구의 60%가 줄어들 것이라는 2000년 3월 유엔보고서의 충격이었다.(Wihtol de Wenden, 2002) 그리고 이러한 인구전망으로 인해 국경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유엔의 진단을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전지구적 차원의 대테러전쟁이 일국사회에 가져온 통제사회화와 안전담론은 불법 체류자에 대한 무자비한 단속과 추방을 정당화해주는 사회심리적 배경이 되었다. 9·11테러를 계기로 부활한 헉팅턴의 문명담론, 즉 문화, 특히 종교로 국제정치를 설명하는 이론(Huntington, 1993), 그리고 문화를 불변하고 단일한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본질주의적 문화주의는 특히 동남아시아 출신 이민자들이 생물학적으로 한국인과 연속성을 지닌 '종족'이 아니라 넘을 수 없는 단절이 있는 하나의 '인종'으로 규정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다양한 담론들은 보편적인 이데올로기 구도에서 보면 세계화시대를 뒷받침하고 있는 두 이데올로기, 즉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의 구성요소들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주요 논리로는 포스트포디즘적인 노동의 유연화론,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개입을 최악시하는 시장절대주의, 기업의 자유, 개인의 자유 등 자유가 사회적 정의나 공익과 유리된 채 절대시되는 자유지상주의, 개인의 안전과 안락을 평등이나 공익보다 우선시하는 안전담론(Vergara, 1992) 등을 들 수 있다.⁶⁾ 신보수주의는 도덕정치(moral politics), 낙태반대운동나 생태근본주의적인 생

명론의 형태를 띠고 있는 도덕주의, 극도로 배타적이고 호전적인 민족주의로서의 애국주의(patriotism), 신학적 차원의 선민주의 또는 예외주의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민담론의 분절성은 또한 최근 한국사회가 새로운 경제도약의 계기로 역점을 두고 있는 동아시아 또는 동북아시아 전략이라는 정치적 배경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 결혼이주여성, 일반여성,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재외한국인과 재한 외국인에 대한 차별화의 근거에는 동북아시아대론, 동아시아공동체론, 한민족공동체론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차원의 발전이라는 새로운 한국사회의 발전전략이 존재한다. 더 근본적으로는 아시아 출신 이민자들을 염두에 둔 ‘다문화’ 논의 자체도 이주민들의 통합이나 한국사회의 다원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다는 한국사회 중심적인 전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두뇌유출⁷⁾, 인신매매와 같은 이민논의의 보편적인 주제들이 한국의 이민에 대해 거의 적용되지 않는 것은 이러한 국수주의적 경향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민족공동체론은 유럽연합과 유사한 동아시아공동체 논의가 제기되고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여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동북아정책의 일환으로 최근에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전망 속에서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주목을 받게 되면서 한민족공동체론이 부상한 것이다. 그런데 이 이론은 한국 및 한반도 중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현무암, 2007: 261) 네트워크공동체의 논의에서는 개방성과 포용적 자세가 요청되지만 대개는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이나 한국어교육의 강화가 강조된다. 한국사회가 한민족공동체의 성원인 재외동포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면 추성훈의 예에서처럼 고국은 한국에만 속하기를 강요하고 일종의 충성서약을 강요하는 식이다. 재외동포정책에서 재외동포들은 통일과정에 활용가능하거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존재로 간주된다. 90년대 이래 학계와 진보 진영의 주된 화두였던 민족주의 비판도 재외동포 문제에서는 금기시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정치적 배경에서 설명될 수 있다.

-
- 6) 신자유주의가 어느 정도 관철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는 이민에 대해 매우 유사한 억압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여 년간 추진되어 온 영구정착을 위한 이민금지 추세가 최근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는 이민에 관한 신자유주의자들의 이중적인 태도에 기인한다. 신자유주의 이론은 원칙적으로 이동의 자유의 차원에서 국제이주에 긍정적이어야 하지만 주요 이론가들은 이민문제에 무관심하거나 모순적인 입장을 취했다. 프리드만의 경우를 보면 한편으로는 이동의 자유의 차원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영역에서 정부규제 완화를 일관되게 주장한 것과는 달리 이민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안보의 필요성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더 나아가 프리드만은 복지국가 프로그램이 개인의 생산적 기여를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 정도의 소득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이민자들의 자유입국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Dreher, 2007: 108)
- 7) 몽골의 경우 전체인구가 295만인데 2004년 한국과의 고용허가제 MOU 체결에 따른 이주자가 해마다 평균 5,000명씩(국가인권위원회, 2007) 그것도 경제적 역할이 큰 연령대의 사람들의 대량 이주는 조만간에 몽골사회의 노동시장과 혼인시장을 크게 왜곡시킬 것이다. OECD 국가들의 경우 자국에 오는 이민자들 중 숙련노동자의 증가율이 미숙련노동자의 증가율보다 2.5배가 높다(Magniadis, 2007: 226) 이 때문에 송금에 따른 본국 경제에의 기여가 전혀 고급 두뇌의 유출이 가져오는 손해를 상쇄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4. 분절화된 동화(segmented assimilation) 대 사회경제적, 보편주의적 통합

우리가 주체가 되어 다양한 종족들에 서열을 매기고 분할통치하는 것은 초유의 경험이다. 그리고 1세기 전 서구처럼 이민집단에 대한 분절화된 표상은 분절화된, 차별적인 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에 제기된 사회통합 논의⁸⁾는 그 긍정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언급한 이민담론의 특성과 그 사회적 배경을 고려할 때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한편 최근 사회통합 논의에서 사회통합이라는 개념은 동화 내지 수동적인 적응의 의미로 쓰이는 경향이 있다. 즉 지금까지는 차이, 다양성, 다문화를 중시하느라 이들을 한국사회에 적응시키는데 소극적이었다고 반성하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동화와 통합의 차이는 모호해진다. 최근까지의 다문화논의에서도 통합은 동화와 유사한 것으로 여겨졌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간 통합을 부정적으로 여겼었다면 지금은 ‘사회안정’과 이주민들의 ‘적응’을 위해 필요한 긍정적인 과정으로 간주된다는 점일 것이다. 사회통합 담론 역시 다문화담론이 그랬듯이 선진국의 경험에서 모방한 것이다. 자국의 언어와 문화 교육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이해 정도를 입국, 체류증 갱신, 국적취득의 조건으로 채택하고 심지어 공화국, 정교분리 등 자국 사회가 표방하는 가치를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등 유럽사회의 최근 경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2005년 소요사태를 겪은 프랑스의 경험도 반면교사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통합’이라는 개념이 다양한 뉘앙스를 지니지만 프랑스 이민자통합모델의 역사에서 우리는 동화와 대척점에 있는 ‘통합’ 모델을 발견하게 된다. 최근까지 순차적으로 프랑스의 이민자 통합모델로 제시되어 온 개념에는 다음 네 가지가 있다. 첫째, 적응(adaptation)은 산업사회의 노동, 기계, 시간, 리듬에 대한 적응을 함축하고 있는 개념이다. 둘째, 동화(assimilation)는 식민지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셋째, 편입(insertion [professionnelle])은 소수민족의 문제를 보편적인 틀에서 고려한다는 것을 함축하는 개념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주류사회와의 관계의 문제를 기술적인 문제에 국한시킨다. 이민논의의 정치화의 대척점인 듯 보이나 사실 프랑스 상황에서 이 두 경향은 대립되기 보다는 상호보충적인 관계에 있다. 그리고 1980년대 프랑스에서 이민문제가 본격화되면서 헤게모니를 장악한 통합(integration) 개념은 다음의 점에서 ‘동화’와 차이가 있다. 통합 개념은 사회에 온전하게 편입되지만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 전체를 부정,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동화와 차이가 있는 것이다.(Sayad, 1977)

다문화논의와 정책의 변화가 동화주의가 아니라 사적 차원의 문화적 다원성과 공적 차원의 사회경제적 통합을 결합하는 통합모델의 모색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8) 최근 정부는 이민자의 사회부적응, 사회적 반이민정서 촉발의 가능성, 사업투입액 대비 이민자의 정책서비스 이용률 저조, 서구 이민사회가 다문화정책에서 사회통합정책으로 전환' 등을 이유로 사회통합교육과 이의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해령, 2007)

= 참고문헌 =

- 국가인권위원회 (2007), 『고용허가제 시행이후 몽골과 베트남의 이주 및 국제결혼과정에 나타난 인권침해 실태조사』.
- 김경일 외 (2004),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 20세기 전반 만주의 조선인, 역사비평사.
- 김민정 (2002).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한국남편’ 되기 (제35차 한국문화인류학회 전국대회 발표논문).
- 김이선 · 황정미 · 이진영, 2007, 『다민족 ·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 (I): 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현주, 2007, 이주노동자와 노동조합, 현실과 과제, 한민족유럽연대 · 이주노동자인권연대, 『한국과 독일의 이주정책과 이주운동』 (미래를 향한 연대, 2007년 이주노동자인권연대 한독공동심포지움 자료집)
- 모스, 조지 2004, 『남자의 이미지』 (이광조 옮김), 문예출판사.
- 심보선 (2007). 온정주의 이주노동자 정책의 형성과 변화, 『담론201』
- 엄한진, 2006년 12월, 전지구적 맥락에서 본 한국의 다문화주의 이민논의, 『동북아 “다문화”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 (동북아시아학회 용역과제 06-8), 13-43.
- 오경석 (2007).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다문화 사회 논의에 관한 비판적 조망.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 현실과 쟁점』 ((사) 국경없는 마을 학술토론회 발표논문집), 2-15.
- 오명석 (1997). 이슬람, 아닷(adat), 근대화 속에서의 말레이 여성의 정체성 변화, 『한국문화인류학』 30-1, 3-51
- 유명기 (1995). 재한 외국인 노동자의 문화적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27, 15-181.
- 윤인진 (2004)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고려대학교 출판부.
- 윤인진 (2007).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동북아시아학회 용역과제 07-7), 251-291.
- 윤형숙 (2003).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한국사회학회/한국문화인류학회,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2003년 한국사회학회/한국문화인류학회 공동 심포지움), 2003년 9월 19-20일.
- 이선옥 (2007).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운동과 다문화주의,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 현실과 쟁점』 ((사) 국경없는 마을 학술토론회 발표논문집), 76-89.
- 이정원 (2007). 한국 이주노동자 현황과 정책, 그리고 대안, 『정세와 노동』 29호, 22-36
- 이주노동자인권연대 (2006) 『고용허가제 실태조사 보고서』.
- 이해령 (2007), 국제결혼이민자가족 중심으로 살펴본 근래 한국사회의 다문화정책과 사회통합정책, 한민족유럽연대 · 이주노동자인권연대, 『한국과 독일의 이주정책과 이주운동』 (미래를 향한 연대, 2007년 이주노동자인권연대 한독공동심포지움 자료집)
- 조성원 (2004). 또 하나의 가족-이주노동자와 한국여성의 국제결혼 (제36차 한국문화인류학회 전국대회 발표논문).
- 최상철 (2008). 노동자 계급의 국제주의적 단결은 이주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것이다, 『정세와 노동』 31호, 47-54
- 함한희 (1995).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따른 인종과 계급문제, 『한국문화인류학』 제

28집, 199-221.

현무암 (2006), 동아시아와 코리안 디아스포라, 『창작과 비평』, 2006년 봄호(통권 131호), 258-273

Alexseev, Mikhail A (2005), Immigration Phobia and the Security Dilemma, Cambridge University

Bourdieu, Pierre (1970). La reproduction, Editions de minuit.

Castles S. & Kosack (1973)

Dreher, Sabine (2007). Neoliberalism and Migration: An Inquiry into the Politics of Globalization, Hamburg: LIT Verlag.

Huntington, Samuel (1993), "The Clash of Civilization", Foreign Affairs, Summer 1993, v.72, n°3.

Magniadas, Jean (2007), Migrations et mondialisation, Le temps des cerises.

Moulier-Boutang, Yann 1998)

Piore (1979)

Rea A. & M. Tripier (2003), Sociologie de l'immigration, La Découverte.

Sayad, Abdelmalek (1977), "Les 'trois ages' de l'emigration algerienne en France", pp. 59-79 in Actes de la recherche en sciences sociales, 15.

Sayad, Abdelmalek (1999), La double absence, Seuil.

Vergara. Francisco (1992) Introduction aux fondements philosophiques du liberalisme, Découverte.

Wihtol de Wenden, C., 2002, "Ouverture et fermeture de la France aux étrangers: Un siècle d'évolution", pp.27-38 in Vingtième Siècle, janvier-mars 2002.